

44104-2221124

한국환경정책연구소

96-4-1

물문제 인간미래의 경종

박영숙 (한국 환경·사회정책 연구소 소장)

3월 22일은 “세계물의날”이다. ‘96년도의 주제는 “목마른 도시들을 위한 물-Water for Thirsty Cities” 이다. 이번 물의 날은 유엔이 금세기의 마지막 회의로 계획하고 있는 일명 도시 정상회의로 불리고 있는 유엔의 제 2차 정주권회의-Habitat II(이스탄불 '96. 6.3~14) 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유엔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계획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은 21세기에는 지구상의 태반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현상은 세계의 자연자원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수자원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의 모든 도시가 직면하게 될 물위기현상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 요인을 배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물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의 도시들은 깨끗한 물의 공급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의 낭비와 오염방지에 주력하며 귀중한 유한자원인 물을 보존,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의 세계의 주요현안인 물문제가 바로 도시정상회의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해결책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성취해야 한다.

‘96년도 세계물의날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를 비롯한 물관련 기관, 학술단체, 연구기관, 언론, 민간단체들이 일제히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 바 있다.

‘96년도 세계물의날에 맞춰

물의날을 하루 앞둔 3월 21일에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이 발표되었는데 물문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관, 하수처리장 등의 물관련 환경기초시설투자를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하는가하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는 종합적 「물관리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하여 ‘97년 예산안부터 투자계획을 연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물관리체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3월 18일부터 물관리종합대책조정위원회를 발족운영한다는 것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수자원의 감소, 낭비 또는 오염현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에 대한 위기상황은 인류미래에 엄중한 경고로써 그 해결은 미룰 수 없는 우선 과제이다. 물문제는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해당된다. 문제는 ‘92년도의 지구정상회의가 불러일으켰던 환경위기위식이 회의가 끝나면서 그 열기가 식었듯 이번 물의 날에 제고된 물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행사의 종결과 함께 또는 15대 총선실시와 더불어 사라질까 염려된다는 것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21세기각국가수자원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물 부족국가(149개국중 78위, 북한은 76위)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1955년 2,492m³ 에서 1990년도에는 1,470m³ (1/2로 감소)로 줄어들고 2025년에 이르면 최고 1,295m³ 최저 1,100m³ 로 물부족국가 (1,700m³) 도 아닌 물기근국가(1,000m³)로 전락될 우려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1994~96년 연속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국 곳곳에서는 물부족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런 제한없이 쓴다는 뜻으로 비유되던 ‘물쓰듯한다’ 는 말이 통용되던 지난날의 물풍족시대는 끝나서 지금 우리는 지역에 따라서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물부족시대에 살고 있으며 향후 30년내에 물기근시대에 살게 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가 아직은 수돗물이건 지하수이건 쓸 만큼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급수지역 주민들의 물부족 고충이나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미 20여년간의 물기근상태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주민의 절박한 갈등을 짐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들이 겨우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수돗물공급중단으로 인한 불편정도가 아니면 어느 한때 느껴본 한시적

인 갈증의 경험에 불과하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로 접쳐지고 있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수자원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써 세계평균인 973mm의 1.3배이므로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보유국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1인당 강수량이 세계의 연평균인 34,000mm의 1/11에 불과한 3,000mm이므로 수자원 빈국에 해당된다. 거기에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성장등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의 수요급증으로 물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뭄이 겹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용수부족으로 인한 제한급수, 공장가동률감축 그리고 농산물 생산을 감소 등은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크게 가져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로 수질의 악화현상이다. 우리의 젖줄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등 4대강의 수질이 '95년도의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3급수로 평가되었다. 1급수(BOD 1ppm)는 한곳도 없고 4대강의 20곳의 수질측정지점중 11곳에서 음용수 한계치인 3급수(BOD 3~6ppm)로 밝혀졌다. 4대강중에서 가장 수질이 양호하다는 수도권 지역의 2000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경우 '94년도에는 1.2ppm이었으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95년에는 1.3ppm으로 악화됐다. 전국에서 쏟아지는 1800만톤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중 46%만이 정화시설을 거칠뿐 나머지는 처리되지 않은 채 강과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은 혼탁되 마실 수 있고 쓸 수 있는 물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셋째로 정부의 물관리정책의 실효 내지는 무대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현재 수량과 수질을 분리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 공업용수는 통산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물관리 행정체계가 다변화되어 있는 현제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물관리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시행중의 정책의 부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선 지적해야할 문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외국의 부분적인 제도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예를 들면 수량확보를 위해서는 대형댐건설을 수질보전을 위한 것으로는 대형하수처리장 설치위주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가 엄청난 예산과 시간 그리고 부지가 소요될뿐만아니라 환경파괴와 피해주민을 양산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재평가단계에 있으며 정책전환을 위한 대안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대형에서 소형화하는 추세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오염을 발생지점에서 처리하는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한 대안들이 연구발표되고 있음에도 정책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경직화된 행정부의 복지부동자세에다 일부 전문가들의 아집과 독선이 가세한 탓이 아닌가 염려된다.

21세기 중반에 세계의 물전쟁이 예고되어 있다. 70년대의 석유파동처럼 물파동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인류미래의 경고장으로서 물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 기업,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유지에 필수조건인 물을 비롯한 자연자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의 전환이다.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자원은 현재대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자정능력도 무한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선 눈이 떠야 한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공업, 농업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사람 한사람은 지금의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경제체제의 수정은 불가피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서의 순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구환경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해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각자가 선 자리에서 종이 한장, 전기 한등, 물 한방울을 아끼는 데서 그리고 물건을 살 때부터 전기절약형으로 만들어졌나, 수선해서 재사용이 가능한가, 재활용은 가능한가 등의 환경점점을 해야하며 최종폐기는 환경친화적으로 하도록 하는 데서 풀리게 되어있다. 그래서 세계환경운동의 표어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로 되어 있지 않나!

196-4-1